

# 김병기號 출항... “내각 구성·추경 처리 최우선”

### 민주 새 원내지도부 출범... 대야 소통 위해 소통수석 등 신설 “상법·형소법·선거법 등 순차 처리...국힘 지도부와 안전 협의”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16일 출범하면서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출 여당으로서 진용을 갖추게 됐다.

특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내각 구성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 민생 경제 회복, 국민 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불철 항공 모함이 되겠다. 국정 안정,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에서 유능한 이재명 정부의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주기를 성원한다”며 “민주당도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시급한 민생 추경과 민생 개혁 법안들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관세 대응 등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각 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국무총리 인준과 민생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무위원 18명 중 13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며 “장관 임명 제정

권을 가진 총리 국회 인준이 최우선 과제이고, 민생 추경 처리와 민생 개혁 법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가 신설해 임명한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새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여러 입법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인사청문회는 기본적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새 원내지도부는 야당과의 대화·협치도 강조했다. ‘내란 종식’과 야당과의 대화는 별개라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 야당과 생산적 대화에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입법 과제 우선순위로 내세웠다.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시기와 순서를 보아가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민생 경제 행보를 하는 만큼 당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며 “명확하지 않은 법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선출되면 일정과 안전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과 입법 추진에 더욱 힘을 싣고자 당내는 물론 대야 소통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와 지원실장, 민생부대표를 신설했다. 지원 실장은 윤준근 의원, 민생부대표는 김남근 의원이 각각 맡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TK 친윤’ 송언석

### “전당대회 조속 개최·당 쇄신”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송언석(62·경북 김천·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으며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 의원과 이현승(4선·부산 부산진구)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확보함으로써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30표, 16표를 얻었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이라며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과거로 (가는) 퇴행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내 안정적 리더십 구축을 위해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당 쇄신 논의를 위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 “임기는 6월 30일까지로 돼 있다. 만약 추가로 비대위 임기를 가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전국위원회 의장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당내에서 대표적인 ‘경제·재정통’으로 꼽힌다.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18년 김천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21대와 22대 총선에서도 연달아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계파색이 없지만, TK 지역구 의원으로서 옛 친윤(진윤석열)계 등 구(舊)주류와 가깝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8월 2일 당대표 선출... 호남 경선 7월 26일

### 선거인단 비율, 대의원 15%·권리당원 55%·일반 국민 30%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총지휘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호남 경선은 7월 26일 치러진다.

16일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최근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최고위

원 자리도 선임한다.

전준위 대변인인 박지혜 의원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가 3명 이상이면 7월 15일 예비 경선을 하기로 했다”며 “이후 권역별 순회 경선을 한 뒤 8월 2일 전국 대의원이 모이는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3명 이상일 때 첫 온라인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제외하고 후보 2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출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임기 중 사퇴한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채우기 때문이다.

순회 경선 일정은 ▲7월 19일 충청 ▲7월 20일 영남 ▲7월 26일 호남 ▲7월 27일 수도권(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다.

후보자 등록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결정됐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여론조사 기관 2곳이 실시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대북 전단 살포 차단’ 접경지 단속 강화

### 경찰 기동대 배치·특사경 순찰... 처벌 위한 법률 개정 검토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는 한편,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을 살포한 단체와 개인을 범법 위반 여부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열렸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방부·경찰청,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지역경찰뿐만 아니라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현행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 법률의 일부 조항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감담회 등으로 수시 소통하며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를 고려해 전단 살포를 사실상 막지만 위헌 소지는 없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연합뉴스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